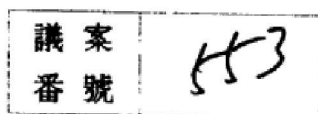


## 大田廣域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



提出年月日 : 1995. . .

提出者 : 大田廣域市長

### 1. 提案理由

公職者倫理法 및 同法施行令, 同法施行規則이 改正・公布  
(94.12.31)됨에 따라 관련 條項을 整備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가. 公職者倫理法이 改正됨에 따라 “財産公開對象 公職者의 登錄  
事項 審査와 그 結果의 處理”를 “財産發錄事項 審査와 그 結  
果의 處理”로 整備코자 함.(案 第3條 第1項 第1號)

나. 公職者倫理法 第8條 第11項이 第12項으로 改正됨에 따라  
條例의 關聯 條項을 整備코자함. (案 第3條 第1項 第2號)

다. 公職者倫理法 第8條 第6項 및 第11項이 第7項 및 第12項  
으로 개정됨에 따라 條例의 관련 條項을 整備코자함.  
(案 第6條 第2項 第1號)

### 3. 參考事項 (關聯法)

公職者倫理法

##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안)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6조 제2항 제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제3조 (기능) ① (생략)</p> <p>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p> <p>2. 법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3~4. (생략)</p> <p>② (생략)</p> | <p>제3조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u>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u></p> <p>2. - - - - 제12항 - - - - -</p> <p>3~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p> <p>2~4. (생략)</p> <p>③~④ (생략)</p>  | <p>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 - 제7항- - - - -</p> <p>- - - 제12항- - - - -</p> <p>- - - - -</p> <p>2~4.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公 職 者 倫 理 法

第 8 條(登録事項의 審査) ①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録된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②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録義務者가 登録財産의 일부를 過失로 漏落하거나 價額合算등에 誤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登録義務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財産登録書類의 補完을 명할 수 있다

③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録義務者에게 資料의 제출요구 또는 書面質疑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調査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録義務者에게 解明 및 疏明資料提出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職有關團體 기타 公共機關의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資料提出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機關・團體의 長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보고나 資料提出등을 거부할 수 없다. <改正 94.12.31>

⑤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人的事項을 기재한 文書에 의하여 金融機關의 長에게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新設 94.12.31 >

⑥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録義務者와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기타 財産登録事項의 關係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陳遮을 받을 수 있다.

⑦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 虛偽登録의 嫌疑가 있다고 의심되는 登録義務者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法務部長官(軍人 또는 軍務員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法務部長官 또는 國防部長官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依頼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 하여금 調査를 실시하게 하고 그 調査結果를 公職者倫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第8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 또는 檢察官의 調査에는 刑事訴訟에 관한 法令(軍事法院法을 포함한다)중 搜查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入身拘束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變動申告事項을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한 후 3月 이내에 財産公開對象公職者 全員에 대한 審査를 완료하여야 한다.

⑪ 公職者倫理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財産公開對象者가 아닌 登錄義務者의 登錄事項에 대한 審査를 그 登錄機關의 長 기타 關係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機關의 長은 審査結果를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은 第1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의 제출 요구를 하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頼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 12. 31>

[全文改正 93. 6. 11]

第 9 條(公職者倫理委員會) ①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國會·大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政府·地方自治團體 및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에 각각 公職者倫理委員會를 둔다. <改正 91.11.37, 93.6.11, 94. 12.31>

1. 財産登錄事項의 審査와 그 결과의 처리
2. 第8條 第1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
3. 第17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承認
4.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權限으로 정한 사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1995년 3월 27일

내 무 위 원 회

###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1995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5. 3. 27)  
상정, 심의,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실장)

#### 1. 제 안 이 유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94. 12. 31)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정비코자 함.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나.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1항이 제1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함. (안 제3조 제1항 제2호)

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 및 제11항이 제7항 및 제1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  
(안 제6조 제2항 제1호)

###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정진철)

본 안건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법 개정내용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위원회 기능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를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결과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대상자와 공개대상자를 불문하고 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심사를 하게 되겠음.

그리고 그 외 개정안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의 신설로 조항이 바뀔에 따라서 조례내용중 법 제8조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임.

따라서 본 개정안은 관련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중  
조항만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